
 보 도 자 료 			
금융위원회	보도 배포 시부터 보도가능 배포 2017.5.17(수)	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제도팀장 홍 성 기(02-2100-2840)	담 당 자	이 영 평 사무관 (02-2100-2842)
	금감원 제재심의국장 이 효 근(02-3145-7800)		임 춘 하 팀 장 (02-3145-7821)

제 목 : 「제재개혁」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

* 금융지주회사법, 은행법, 보험업법, 자본시장법, 금융사지배구조법, 전자금융거래법, 대부업법, 상호저축은행법, 여신전문금융업법, 신용협동조합법, 신용정보법

- ①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으로 '숨방망이 금전제재' 문제 개선
- ②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령간 제재의 형평성 확보
- ③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 위탁 등 제도 보완으로 감독행정의 효율성 제고

1 추진경과

- ☐ 「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」(‘15.9월)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*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

* 개정법은 '17.4.18일 공포되었으며, '17.10.19일부터 시행 예정

<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사항 >

- ① 과태료·과징금 부과도 약 2~3배 인상 및 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
- ② 저축은행·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
- ③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등 제재제도 개선

2 주요 내용

1.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

☞ 11개 시행령 공통

- ☐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~3배 인상(법인 최대 1억원, 개인 최대 2천만원)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
-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%, 60%, 30%, 20%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
 -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*
- * [예] 경영공시의무 위반 : (現) 금융지주법 5백만원, 자본시장법 1천만원, 보험업법 3.5천만원 → (改) 6천만원
- ☐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·전자금융·신협법 시행령에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신설

<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>

- ☐ (기 준) A금융투자회사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
- ⇒ (개 정)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

2. 과태료 면제근거 신설

☞ 11개 시행령 공통

- ☐ 공정거래법·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타 법령 사례를 참고하여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신설
-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

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

☞ 금융지주·여전·신용정보법 시행령

□ 과징금 산정시 **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기 위해 현행 기본 부과율을 폐지하고, 기본부과율 관련 사항을 삭제**

○ 합리적 근거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클수록 체감 적용하는 기본 부과율 대신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도입 ⇒ **검사·제재규정(금융위 고시) 개정 예정**

<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전·후 >

<현 행> 기본과징금 산출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**단순히 법정부과한도액만을** 기준으로 하여 구간별로 체감^{*}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

* 법정부과한도액(통상, 위반금액 × 부과비율) 구간별로 체감하는 형태 : (2억 이하) 7/10 → (2~20억) 7/20 → (20~200억) 7/40 → (200억~2천억) 7/80 → (2천억 초과) 7/160

⇒ 「검사·제재규정」(금융위 고시)에서 규정

$$\begin{array}{|c|c|c|c|c|} \hline \text{법정부과한도액} & \times \text{기본부과율} & \text{기본과징금} & \pm \text{가중·감경 및 조정} & \text{과징금 부과액} \\ \hline \text{(위반금액} \times \text{부과비율)} & & & & \\ \hline \end{array}$$

<개 선>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세부요소별 평가를 종합하여 **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 후 부과기준율(100%, 75%, 50%)을 차등 적용**

※ 공정위·방통위도 위반의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·평가한 '부과기준율'을 관련 매출액에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음

$$\begin{array}{|c|c|c|c|c|} \hline \text{법정부과한도액} & \times \text{부과기준율}^* & \text{기본과징금} & \pm \text{가중·감경 및 조정} & \text{과징금 부과액} \\ \hline \text{(위반금액} \times \text{부과비율)} & \text{* 위반내용·정도 고려} & & & \\ \hline \end{array}$$

<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>

□ (기 준) 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음

⇒ (개 정) 법상 부과비율 인상(10% → 30%) 및 기본부과율 폐지(부과기준율 도입)로 인해 과징금은 11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

4.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 위탁

☞ 금융지주·자본시장·지배구조·저축은행·대부업·여전법 시행령

□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^{*}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

* 퇴직자가 재직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의 통보

구 분	금감원 위탁 퇴직자 제재권한
금융지주법	· 퇴임 임원 : 주의·경고 상당 · 퇴직 직원 : 주의·경고·문책 상당
자본시장법	· 퇴임 임원 : 주의·주의적 경고 상당 · 퇴직 직원 : 주의·경고·견책·감봉·정직 상당
지배구조법	· 퇴임 임원 : 주의·주의적 경고 상당 [*] · 퇴직 직원 : 주의·견책·감봉·정직 상당 <small>* 지주·금투업자·종금사·저축은행</small> <small>* 저축은행은 문책경고 상당까지 위탁</small>
저축은행법	· 퇴임·퇴직 임직원 : 주의·경고·문책 상당
대부업법	· 퇴임 임원 : 주의·경고·문책 상당 · 퇴직 직원 : 주의·경고·문책·면직 상당

※ 여전법은 법률에서 직접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, 시행령에 남아 있는 퇴직자 통보의 금감원 위탁 규정을 삭제

3 향후 계획

□ 11개법 시행령은 '17.5.23일^{*}, 6.7일^{**}부터 입법예고(40일간) 후 규제위·법제처 심사 및 차관·국무회의를 거쳐 '17.10.19일 시행

* 금융지주·은행·보험·자본시장·지배구조·전자금융·대부업법 시행령 (7개)

** 저축은행·여신전문금융업·신용협동조합·신용정보법 시행령 (4개)

□ 과징금 산정시 **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** 등을 위해 관련 하위규정^{*} 개정도 조속히 추진

* 검사·제재규정,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

<첨부> 「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」 이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내용